

이재명 “12일” vs 검찰 “9일 까지” 소환 시기 줄다리기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1~2차 조사 불발 '단식 7일째' 이 대표 건강 악화...수사·영장 청구 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 측이 조사 일정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내에 출석을, 이 대표는 다음 주에 출석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선 조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다음 주 초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단식 일주일째 들어선 이 대표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검찰의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는 등 단식 정국의 장기화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측에서는 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 주에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

이 대표가 다음 주인 오는 12일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엔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수원지검 측에서는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는 앞서 2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라서 검찰은 늦더라도 이번 주 7~9일 사이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앞서 2차례 검찰의 이 대표 소환 조사가 불발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검찰로부터 8월 30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아 같은 달 24일 또는 26일에 조사받겠다고 했다.

이를 검찰이 거부하면서 1차 조사는 무산됐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11~15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검찰은 이 또한 “일방적인 통보”라며 9월 4일에 조사받을 것을 재차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4일 오전 조사만 받았다고 요구했고, 검찰이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보이자 이 대표는 지난 1일 ‘4일 불출석’ 의사를 검찰에 전달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넘어야 할 북한 스마트 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남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단식 7일째인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조사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할 말이 많아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회의에서는 2-3가지 주제를 두고 발언에 나서는 이 대표이지만, 단식으로 힘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말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대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국민주권’ 부정 발언에 대해서만 비판했고 중간 중간 쉬어가며 말을 이어가기도 했다.

전날 진행된 촛불문화제에서도 이 대표는 마이크를 잡았지만 길게 발언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제 밤 10시에 봤다. 얼굴이 안 좋아졌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단식 투쟁 중인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기였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이번주나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해도 건강상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식 정국이 이 대표가 쓰러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이 대표의 건강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싸움은 제가 쓰러진다 해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힘이 빠지는 만큼 더 많은 국민께서 더 힘내 주실 것이고, 제 목소리가 작아지는 만큼, 더 많은 국민이 더 크게 외쳐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적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색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감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을 비롯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를 특별

감사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대기만 17일”

윤영덕 의원 “인력 확대 필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가 늘면서 평균 대기일수가 17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은 6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종합상담 서비스 실적 현황을 살펴보니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채무나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종합상담 서비스 실적은 2021년 6만1173명(평균대기일수 3.3일) 2022년 6만9262명



(6.1일), 2023년 지난 7월 현재 11만8132명(17.7일)이 상담을 받았다.

올해 상담을 받은 사람 중 지역본부별로는(평균대기일수) 보면 경기남부 1만4853명(20.0일), 인천경기북부 2만1298명(19.0일), 서울

강원 2만3485명(18.6일), 부산경남 1만6490(18.3명), 대구경북 1만2853명(17.0일), 대전충청 1만3209명(16.2일), 광주전라제주 1만4326명(13.1일) 등이다. 윤영덕 의원은 “가계부채 위기에 따라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센터를 찾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추가 상담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박광온 “한·미·일 중심 외교, 한국 장래에 암초될 것”

민주당, 단식 천막서 최고위...“중국과 경제외교 필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한미일 중심의 일방주의 외교가 경제를 위축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결국 국민 불안을 증폭시켜 대한민국 장래에 암초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앞 ‘단식 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되 한중 관계와 한·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균형감 있는 성찰과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군사 기술을 주고받고 공동 군사훈련까지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우려했던 대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참석차 해외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뒤엎긴 국정과 추락하는 경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교에서

라도 반드시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 균형·실리 외교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통상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온 우리에게 중국과의 경제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남방정책은 경제영토 확장의 소중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 연구기관들이 공동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만든 보고서를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